

신기후체제 대응은 에너지신산업이 대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 주 현



지난 해 12월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2020년 이후부터는 예외 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 자발적 기여방안을 채택해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5년 주기로 감축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는 자발적 이행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경제성장의 재도약을 함께 이룰 전략을 찾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온실가스 고배출형이기 때문에 신기후체제가 당장에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한편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탈바꿈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회의 중심에 에너지신산업이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전력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그리드의 기술적 기반 위에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을 혁신적으로 추구하는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의 주요 분야는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공정 등이다. 한마디로 땅 속에 있는 부존자원이 아니라 기술이 에너지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산업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산업의 창출 동력으로 삼는 에너지신산업은 분명 경제성장을 둔화시키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획기적 분야임은 분명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해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을 개발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ICT 강국인 우리나라도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2014년부터 8대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중장기적인 확산전략의 추진으로 보다 체계화된 혁신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에너지신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관련 법제도 정비와 전기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청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탄생은 정부의 인큐베이팅 정책을 통해 앞당길 수 있으나, 산업의 진흥은 자생적인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 정책은 8대 에너지신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초기 인큐베이팅 정책과 민간투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시장 여건의 조성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업자와 소비자 스스로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을 창출하거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시장의 진입장벽이 없어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기후체제 대응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현재 저성장 국면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신산업이 최상의 대안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